

쟁점(Ⅱ): 한미 FTA와 한미동맹

한미 FTA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는 동북아 불안정을 가져 온다

배 성 인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연구교수)

한미동맹에 대한 무의식의 습관

2006년은 한국사회가 크게 요동친 한 해였다. 전략적 유연성으로 출발하여 한미 FTA,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굵직굵직한 쟁점들이 초강력 폭풍이 되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하지만 폭풍의 결과가 매우 미약했던지 여전히 독기를 머금고 파리를 틀고 앉아있다. 2007년에 이들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불어 닥친다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만신창이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 쟁점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 미국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미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서 막대한 영향력과 규정력을 발휘하고 있다. 언제나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쟁점이 등장하면 상당수 현안이 미국과의 관계 문제로 귀결된다. 미국과

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이제 상식이다. 그것은 미국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 60여 년 동안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미관계는 시작부터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했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과 노력들이 매우 취약하며, 오히려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한미동맹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기제로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한미동맹은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게 해주며 빈곤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원의 존재였다. 또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 해주면서 대한민국을 번영의 길로 이끄는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많은 시민들은 한미동맹을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미 FTA를 통해서도 이러한 습관의 반복을 목격하였다. 한미 FTA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논리가 일반대중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한미 FTA는 경제협정으로서 외교·안보적 효과를 직접적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결과적으로 양국 간 경제적 이해관계 증대로 한미 동맹관계가 공고화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한다. 한나라당 역시 지난 2006년 10월 19일 한미 FTA 대책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FTA는 통상대국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자 한미동맹 강화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미 FTA를 찬성하는 자들은 동일한 논리를 펴고 있다.

이들은 한미 FTA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경제와 안보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한미 FTA와 한미동

맹 강화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것은 한미 FTA가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된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현재 한미 FTA는 한미관계에서 경제라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 다른 축인 정치군사안보문제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중심에 평택 문제가 놓여 있다. 결국 한미 FTA와 전략적 유연성은 모두 한미관계에서 파생된 쌍생아이다. 노무현 정부는 평택 문제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 그리고 한미 FTA를 통해 한미동맹의 끈을 더 조이면서 미 제국주의의 탐욕에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 추진의 본질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추진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당초 노무현 정부에게 FTA 우선순위는 중국과 아세안이었다. 무엇보다 중국이 농산물 시장에서의 양보라는 파격적 조건까지 내놓으면서 한중FTA를 제안했었고, 농업 피해를 고려하더라도 중국은 FTA 추진 1순위였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4대 선결 조건을 수용하면서까지 미국과의 FTA 협상을 개시한 것이다. 중국의 제안을 뿌리치고 미국을 선택한 것은 국내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민감한 고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현 정부가 한미동맹의 틀에 묶여 한미 FTA를 결정했으며, 한미 FTA의 추진배경에 북한문제로 벌어진 한미동맹의 틈을 FTA로 메우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이 사실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2월에 여당 일부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미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 아니냐”며 “북한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 분야 밖에 없다”고 발언했다는 사실이 『경향신문』 2006년 8월 8일자에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의 입을 빌려 보도된 것이다.

즉,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유화’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 인정과 PSI 부분협력, 스크린 쿼터 축소를 비롯한 4대 선결조건 등 일련의 미국 요구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띤 것은 사실이지만 북핵을 필두로 한 북한문제 만큼은 ‘평화적 해결’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보일 수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최대의 외교 화두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게다가 미국의 한미 FTA 협상이 경제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안보적인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을 협상의 중심의제로 삼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여부나 그 판단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당시 상황을 고려해도 이해하기가 어렵다. FTA협상개시를 위한 4대 선결조건 수용이나 그 이후 협상과정에서 드러난 준비부족, 의사결정과정의 비밀주의, 독단성 등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문제점들을 이 발언과 연관시켜 볼 때 사태의 진실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미국 측의 의도는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개시 선언에 맞추어 성명을 내고 “한국과의 FTA는 양국 모두에 중요한 경제적 · 정치적 ·

전략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며, 미국의 아시아 개입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양국은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통의 가치와 아시아와 전 세계에 자유 평화 번영을 확산하려는 깊은 열망으로 뭉쳐 있다”고 덧붙였다(『한국일보』, 2006.2.3). 그는 이어 “한국은 우리의 7대 무역국이자 수출 시장”이라며 “한국과의 FTA는 미국의 농·축산가, 노동자, 업계에 대한 (미 정부의) 시장 개방과 기회 확대 약속을 진척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FTA 협상이 세계전략 및 아시아 전략과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아시아 개입 증대가 의미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중국 급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 강화라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한국 외통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미 FTA를 농구에 비유해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덩크슛이 될 것’이라 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미 FTA를 중국의 급부상 흐름을 저지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그동안 미국에게 불리했던 동북아 정세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미 FTA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론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노무현 정부의 설명에는 FTA로 한미 관계를 정치·군사 관계에 이어 경제 관계에서까지 더욱 밀접한 일체화 수준으로 가져간다는 의도가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구도는 이러한 발상과는 반드시 합치하지 않는 흐름 속에 있으며, 그 속에서 이 지역의 국가들이나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이 확대되어 왔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특히 그 동안의 한미 FTA 추진과정에서 부시 행정부의 집요하고도 살천스런 태도에 노무현 정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처를 입으며 당황하기 시작했으며, 미국은 역시 제국주의답게 자신들의 의도를 드러

내면서 구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 FTA가 미 제국주의의 정치·경제·군사적 패권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 FTA는 부시 행정부가 공표했듯이 <경제+정치+외교안보+군사적 포괄협정>으로 이제까지 미국이 추진해온 FTA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적 통합 FTA다.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 지배블럭이 한미 FTA라는 승부수를 던지는 형태에 노무현 정부가 합류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 FTA와 한미동맹 강화론의 허구성

한미 FTA 체결로 인한 한미동맹의 효과를 주장하는 논리를 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대북긴장이 완화되어, 대북경제 협력 활성화 등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간의 경제관계가 긴밀해지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직결되게 되며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미국의 헌신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FTA 추진시 미국은 정치외교적 의미에 높은 평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이념적 동맹관계가 경제적 동맹관계로 대체되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한국에 대한 안보불안 해소, 선진제도의 정착 등을 통해 한국의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에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간의 안보적 이해관계에 FTA 체결이 상당 정도의

영향을 끼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FTA가 결정적 변수가 되리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왜냐 하면 양국 각각의 다양한 국내변수, 양국과 제3국(북한, 중국, 일본 등) 간의 개별적 관계, 각국 고유의 외교 노선 등 여러 차원의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FTA 체결은 한미안보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독립변수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한미 FTA 체결이 양국간 동맹관계를 복원시켜주고 더 나아가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로 승격시켜줄 것이라는 기대는 불확실하다. 과거와 달리 미국의 패권체제가 중국과 EU 등의 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정책이 국내 이익집단의 보호주의 압력과 로비, 국내 제도적 변수, 그리고 이념의 역할 등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미 FTA를 통한 안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심각한 문제는 한미 FTA 체결이 한미동맹 혹은 한미안보관계의 공고화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다시 중국의 소외현상과 북한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고화된 한미동맹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현재의 미일동맹과 조우하여 중국에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만일 그러한 공조체제가 형성되어 중국이 소외된다면, 중국은 이를 자신에 대한 견제 및 포위전략으로 받아들여 역내 외에서 독자 행보를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중국 소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주의 발전은 요원한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핵문제 등에서 한국에 협조하지 않는 등 한국을 소외시키는 외교 전략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시아 지역주의의 성패는 상당 부분 역내 핵심 국가인 한·중·일 3국의 협력 여부에 달려있는 바, 그 핵심의 하나인 중

국이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에 대응하여 북·중·러 북방 3각 공조체제가 구축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는 새로운 갈등과 대립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사실 4대 선결조건 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이 미국과 FTA를 맺을 수 있는 보다 중요한 선결조건이었다. 이로써 한국군은 주한미군의 하위동맹군으로 확고하게 편입되었고, 평택 미군기지는 ‘중국 포위’와 ‘북한에 대한 예방적 선제공격’을 위한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경향은 보다 강화되고 이에 따라 분단도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한미 FTA 협상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론은 한반도를 군사적 위협으로 내모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